

【논 문】

식민정책학의 신지평과 만주문제 인식

-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를 중심으로 -*

박 양 신**

차례

- I. 머리말
- II. 태평양문제조사회의 만주문제 인식
- III. 만주사변과 만주국
- IV. 만주이민과 일만 통제경제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만주사변 이후 전개되는 만주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인식을 식민정책학자인 야나이하라 다다오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야나이하라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주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만주사변은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국민주의의 충돌이었으며, 그 산물이 만주국이다. 그는 만주국에 대해 일본이 ‘식민지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이며, 정부의 주장처럼 독립국가가 아니라 ‘준보호국’ 정도의 위상이라고 규정했다.

만주사변 이후 실행된 정부의 만주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만주는 일본인의 이주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이는 종전부터 과잉 인구의 해결책으로서 이민과 식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던 야마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4S1 A5B8066696).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모토 미노오를 비롯한 당시의 식민정책학자들이 만주 이민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대조되는 주장이었다.

야나이하라는 일만경제블록론이나 만주 경제통제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일본과 만주의 블록경제만으로는 일본, 만주 모두 자금자족적 경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블록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만주 자체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주 경제통제책에 대해서는 전국적 기업합동안은 만주의 경제발달 수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군사적 견지에서 산업통제는 경제의 ‘상도(常道)’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주제어 : 야나이하라 다다오, 식민정책, 만주문제, 태평양문제조사회, 야마모토 미오노

I. 머리말

만주사변은 세계공황의 여파로 불온해 있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가하게 되었다. 밖으로는 장작림(張作霖) 폭살사건 이후 증폭되어 온 중일 간 갈등을 무력으로 돌파하여 만주로 세력을 확대해가게 되고, 안으로는 그 여파로 런던군축회의 이후 점증해온 군부 쿠데타 세력의 움직임을 추동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주사변으로 인한 만주국의 건설과 만주로의 세력 확장은 식민지 연구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도쿄제국대학에서 1939년부터 ‘식민정책’ 강의를 담당했던 도바타 세이이치(東畑精一)는 일본의 식민학을 돌아보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식민적 활동은 만주사변 이후 그 성질, 수량 모두 현저히 변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이후 “동아”로 확대된 일본의 식민적 활동에 대한 연구라는 대규모의 과제를 식민정책학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¹⁾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종래 조선, 대만을 위주로 행해지던 식민정책학의

1) 東畑精一, 1942, 『植民學の大觀』, 『東京帝國大學學術大觀: 法學部・經濟學部』, 國際出版印刷社, 642쪽, 653쪽.

연구는 만주사변 이후 현저하게 만주와 ‘대동아’ 지역으로 연구의 중심을 이동시켰다.

그렇다면 이처럼 식민정책학의 연구 중심을 변화시켜 신지평을 여는 주요 계기가 된 만주문제에 대한 식민정책학자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본고는 이 문제를 당시 대표적인 식민정책학자인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1893-1961)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사변 이후 언론 통제가 가해지는 가운데도 가장 적극적으로 만주문제를 논하고 강의한 학자가 야나이하라이기 때문이다.

야나이하라는 여타의 식민정책학자와 다른 ‘식민’ 개념을 채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²⁾ 즉 그는 ‘식민’을 “사회군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현상”³⁾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식민’ 개념의 핵심에 두고 있는 본국과 식민지 간의 정치적 종속관계를 필수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그에 따라 식민지의 개념도 “사회군의 이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있는 지역”인 ‘실질적 식민지’와, 정치적 종속관계에 있는 속령이나 신영토를 의미하는 ‘형식적 식민지’로 구분하고, 식민연구의 주된 대상은 실질적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 이와 같은 실질적 식민론과, 야나이하라가 식민지 통치책과 관련해 주장한 ‘자주주의’(=자치주의)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는 서로 상반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⁵⁾ 야나이하

2) 식민정책론을 포함하여 야나이하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는 岡崎滋樹, 2012, 『矢内原忠雄研究の系譜』 『社會システム研究』24에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본고와 관련해서 야나이하라의 식민정책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淺田喬二, 1992, 『矢内原忠雄の植民論』 『日本植民地研究史論』, 未來社:村上勝彦, 1993, 『矢内原忠雄における植民論と植民政策』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第4卷, 岩波書店:竹中佳彦, 1993, 『帝國主義下の矢内原忠雄 1931~1935年』 『北九州大學法政論文集』20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는 이석원, 2003, 「근대 일본의 자유주의 식민정책학 연구: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정책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이규수, 2004,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정책론과 조선인식」 『대동문화연구』 46: 문명기, 2015, 「왜 『帝國主義下の朝鮮』은 없었는가?」 『사총』 85가 있다.

3) 矢内原忠雄, 1963, 『植民及植民政策』(1926) 『矢内原忠雄全集』第1卷, 岩波書店, 14쪽.

4) 矢内原忠雄, 1963, 위의 책, 31~34쪽.

5) 주2)에서 든 논문에서 아사다(淺田)는 실질적 식민론을 야나이하라 식민론의 ‘최대의 걸림돌(淺田, 1992, 앞의 책, 318쪽)이라고 했다. 즉 실질적 식민론은 식민지 문제의 본질인 민

라의 식민 개념이 고전경제학의 아담 스미스 학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⁶⁾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야나이하라는 훗날 자신은 식민정책에 관한 공부를 시작할 때 『국부론(國富論)』에서부터 들어갔으며, 아담 스미스를 많이 공부하고 좋아했다고 밝힌 바 있다.⁷⁾ 그의 식민정책론에 흐르는 기조는 당대에 사회과학을 지배했던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이며, 식민정책의 이상적 모델 또한 영국의 도미니온(dominion) 형태의 자치주의였다.

자유주의의 기조는 그의 만주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판의 기제로 작동했다. 야나이하라는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 성립, 그리고 식민정책학의 본령 중 하나인 만주 이민 문제, 만주국 경제정책 등에 대해 그 어느 하나 정부와 관동군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 야나이하라는 자신의 식민정책학 연구를 제국주의론의 일환으로서 식민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하는 작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통해 제국주의적인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을 지향했다고 술회하였다.⁸⁾ 식민 현상(現象)의 학문적 연구와 정치적 현상(現狀)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동거가 그의 만주문제 인식에서도 엿보인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야나이하라의 만주문제에 대한 인식을 당시 지식인 사회의 만주문제에 대한 인식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한편, 다른 식민정책학자와의 비교를 통해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류 지식인 사회에서 만주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죽문제에 대한 분석을 포기하는 이론적 결함을 가지며, 식민현상의 추상적, 일반적 긍정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였다(淺田, 앞의 책, 331쪽). 이에 반해 무라카미(村上)는 야나이하라가 식민지에 대한 ‘자주주의’ 정책을 주장한 것이 점진적인 식민지 영유 폐지를 함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실질적 식민론이야말로 야나이하라의 제국주의적 식민정책 비판의 입각점이었다고 반박하였다(村上, 1993, 앞의 논문, 219쪽). 한편, 사카이(酒井)는 야나이하라가 ‘사회군의 이주’를 ‘식민’ 개념의 중심에 두게 된 배경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국가주권지상주의에 대비되는 ‘사회의 발전’이라는 시대사조가 존재했다고 지적하였다. 즉 국제관계를 비국가 주체의 상호작용으로서 파악하는 트랜스내셔널한 시각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酒井哲哉, 2006, 『「帝國秩序」と「國際秩序」』, 『岩波講座「帝國」日本の學知』第1卷, 岩波書店).

6) 村上勝彦, 1993, 앞의 논문, 209쪽.

7) 矢内原忠雄, 1997, 『矢内原忠雄: 私の歩んできた道』, 日本図書センター, 82쪽.

8) 矢内原忠雄, 1997, 위의 책, 39쪽, 68쪽. 같은 글에서 야나이하라는,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식민지 통치에 관한 논의를 전연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발점이 된 태평양문제조사회의 만주문제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그 위에 야나이하라의 논의를 동시대 그와 함께 식민정책학의 쌍벽을 이룬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 야마모토 미오노(山本美越乃)의 논의와 비교하면서 검토한다. 야마모토는 이 시기에 많은 글을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야나이하라와는 종종 다른 입장을 보임으로써 야나이하라의 논의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태평양문제조사회의 만주문제 인식

만철조사부를 비롯하여 만주와 연관 있는 인물이나 기관을 제외하고,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서 만주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29년 10월 교토에서 개최된 태평양문제조사회(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제3회 회의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문제조사회는 미국 YMCA의 발의로 태평양지역에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의 지식인에 의해 1925년에 창설된 민간의 국제 조사연구단체로, 태평양지역에 이해, 관심을 갖는 각국의 상호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각국 간에 존재하는 현실 문제를 각국 지부에서 상시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할 것, 그 성과를 가지고 격년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규명할 것, 회의 종료 후 귀국해서 각자의 나라에서 여론의 계몽에 노력할 것 등을 활동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⁹⁾ 일본에서는 1926년에 정식으로 태평양조사회가 조직되었는데, 이에 참가한 지식인의 대다수가 당시 ‘리버럴’로 불리던 사람들로서, 대체로 친미적 국제주의자들이었다는 특색이 있다. 특히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와 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다카기 야사카(高木八尺), 쓰루미 유스케(鶴見祐輔), 다카야나기 겐조(高柳賢三), 나스 시로시(那須皓), 마에다 다몬(前田多門) 등—이 중심을

9) 片桐庸夫, 2003, 『太平洋問題調査會の研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33쪽.

이루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도쿄제국대학 교수이기도 하였다.¹⁰⁾

1925년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회 회의에서는 미·일 간 이민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일본측 참가자는 미국의 일본인 이민배척문제의 부당성을 강력히 어필하여 지지를 얻었다.¹¹⁾ 이는 전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이민법이 국가별 이민 수를 규제하면서 주로 일본인 이민을 표적으로 한 배척조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 비판의 소리가 고양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태평양문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야나이하라도 여기에 참여했으나¹²⁾ 실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¹³⁾ 야나이하라는 이후로도 1945년 이전에는 태평양문제조사회에 직접 관여한 흔적은 없으나, 이 단체와 인연이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2년 뒤 1927년 7월에 열린 제2회 회의에서는 제1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이민문제를 제1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영국이 새로 참가하면서 제기한 중국문제가 제1의 안건으로 갑자기 변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측이 이 회의에서 중점을 둔 것은 역시 이민문제였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에서 제1회 회의와 달라진 점은 이민문제를 인구식량문제로서 제기함으로써 일본이 안고 있는 인구식량문제의 심각성을 각 회원에게 인식시키고, 그것과의 연관에서 이민문제를 재인식시킨 점이다.¹⁴⁾ 1927년은 인구증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일본정부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식량문제위원회를 설치한 해이다. 태평양문제조사회에서 일본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원탁회의에서 일본의 인구식량문제에 대해 발표한 것은 나스 시로

10) 中見眞理, 1985, 『太平洋問題調査會』, 『思想』782, 106쪽. 니토베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일본 태평양문제조사회의 이사장을 지냈다.

11) 이하 태평양문제조사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개략은 片桐庸夫, 2003, 앞의 책에 의거한다.

12) 澤柳政太郎編, 1926, 『太平洋の諸問題』, 太平洋問題調査會, 7쪽. 야나이하라는 유학에서 돌아와 1923년부터 도쿄제국대학 교수로 식민정책 강좌를 담당하고 있었다.

13) 태평양문제조사회의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山岡道男, 2010, 『太平洋問題調査會關係資料』, 早稲田大學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참조. 이 명단에 의하면 제1회 회의를 위한 연구회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14) 片桐庸夫, 2003, 앞의 책, 110쪽.

시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교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메이지시대 이후 최근 60년간 배증했으나, 쌀의 생산액도 최근 45년간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량 자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향후 일본의 경지면적이 증가할 전망은 거의 없는데다가, 수확량이 증가할 여지도 크지 않아 식량 증산의 전망이 어둡다고 보았다. 그래도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식량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상공업의 발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천연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국민소득 증대의 기세는 이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인구도 이제 포만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잉인구의 압력은 밖으로 출구를 찾아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¹⁵⁾

그러나 정작 국내의 인구식량문제조사회에서는 인구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이식민(移植民)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답신(答申)에 의하면 “이주, 척식은 인구문제 해결에 직접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천연자원의 개발, 생산력의 함양, 기업 및 노동의 이동성 증진에 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내외 이주의 장려와 이민 보호의 정책을 제시하였다.¹⁶⁾ 인구식량문제조사회에서 조사한 당시 식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봐도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 해외 이식민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논자는 결코 다수라고 보기 어렵다.¹⁷⁾

이에 반해 나스 시로시는 인구과잉의 해결책으로 이민을 주장하였고, 그 이후도 이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만주사변 발발 이후 1932년 1월, 관동군이 만주 전반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개최한 ‘만몽에서의 법제 및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하시모토 덴자에몬(橋本伝左衛門) 교토제국대학 농학부 교수와 함께 만주이민 즉시 단행의 적극론을 강경히 주장하였다.¹⁸⁾

한편, 제2회 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중국문제에서는 관세자주권 문제, 치

15) 井上準之助編, 1928, 『太平洋問題-1927年ホノルル會議』, 太平洋問題調査會, 138~140쪽.

16) 人口食糧問題調査會編, 1930, 『人口食糧問題調査會答申說明』, 人口食糧問題調査會, 153쪽.

17) 人口食糧問題調査會編, 1928, 『人口問題ニ關する世論』, 人口食糧問題調査會 참조.

18) 滿州移民史研究會編, 1976, 『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移民』, 龍溪書舍, 7쪽.

외법권 문제, 조계·거류지 및 조차지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 회의에서는 만주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1928년 장작림 폭살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만주에 집중됨에 따라 마침내 1929년의 제3회 회의에서는 만주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에 일본측 참가자들은 비로소 만주문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일본 태평양문제조사회는 만주문제를 연구부 내 법무부(法政部)에서 조사하기로 하고, 만주문제 조사의 주임으로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도쿄제국 대학 법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이후 자료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졌고, 1929년 2월 이후 만주문제 특별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전문가의 강연과 보고를 들었다. 로야마 자신은 1929년 3월 23일에서 5월 6일까지 직접 만주 현지 조사를 행했다.¹⁹⁾ 이상을 통한 연구결과와 그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의 간행은 이후 만주문제 연구의 밑거름이 된다.

태평양문제조사회 제3회 회의에서 일본측의 만주문제에 대한 기본 태도는, 이들이 외무성으로부터 만주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고 필요에 따라 의견조정을 한 것 등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즉 당시 일본이 만주에서 조약상 획득하고 있던 권익을 옹호할 것이며, 그 권익은 정치적, 군사적인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²⁰⁾ 여기서는 회의에서 만주문제에 대해 발표한 로야

19) 片桐庸夫, 2003, 앞의 책, 160-161쪽. 로야마는 만주 현지조사를 했을 당시의 감상을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얼빈에서 양양계(昂昂溪)로 가서 조남(洮南)을 거쳐 사평가(四平街)로 돌아왔을 때 내가 깊이 느낀 것은 북만주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일소되고, 모두가 지나색(支那色)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하얼빈 역전을 메운 지나 군인의 모습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이다. ……이런 형세라면 일본과 지나의 충돌은 마침내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예감이 이때 들었다. 특히 남만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분에는 웬지 모를 당혹감이 보였다. 보통 수단으로는 이 긴장된 공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소극적이면서도 일종의 각오에 가까운 것이 느껴졌다. 특히 내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은 경제 발전이 궁지에 몰리고, 장가(張家) 정권과의 철도경쟁에도, 또한 개인간의 상업경쟁에도 곤혹해하고 있던 동포의 얼굴에서 10년 전의 활발한 기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기를 느낀 나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파국을 생각하면서 한층 더 국제평화기구의 존재와 그 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를 논했다.” (蠟山政道, 1933, 『日滿關係の研究』, 斯文書院, 3쪽). 로야마는 이때 벌써 중일의 충돌을 예감하고 있었다.

마의 보고와 이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²¹⁾ 이어서 그 이전에 만주 문제 특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던 국제법학자 시노부 준페이(信夫淳平)의 특수권익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로야마는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 “Japan’s Position in Manchuria”에서 만주에서의 일본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 지정학적·역사적 관계, (2) 정치적 권리, (3) 경제적 이익, (4) 문화관계의 네 장으로 나누어 조사 결과를 서술하였다. (1)에서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만주에 진출하고, 이후 러일협상, 21개조 요구 등을 통해 만주 권익을 확대해간 과정을 서술하였다. 만주와의 관계가 이처럼 지정학적 환경에 조건 지워져 있는 만큼, 향후도 태평양에 면해 있는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다룰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일본은 만주와의 관계를 일본의 전략과 제국 조직에 사활적인(vital)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에서는 후술하는 시노부 준페이의 연구에 의거하여 일본의 조약상 제 권리를 제시하고, 이어서 그 권익 실현을 위한 기구들, 즉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의 행정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3)에서는 투자 및 통상관계에서 본 일본의 경제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만주에서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만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만주에서의 경제활동이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일본의 경제적 이익은 점점 더 천연자원의 개발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4)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으로 근대적 문화가 형성되게 된 만주 사회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내셔널리티와 뚜렷한 관계가 없는 새로운 문화 형태의 출현을 강조하였다.²²⁾

로야마는 결론에서 일본정부와 일본인은 ‘만주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

20) 片桐庸夫, 2003, 앞의 책, 161~162쪽.

21) 제3회 회의에서의 로야마에 대한 연구로 藤岡健太郎, 2005, 『滿州問題の「發見」と日本の知識人』 『九州史學』 143이 있다.

22) 이상은 Masamichi Royama, 1930, “Japan’s Position in Manchuria”, J. B. Condliffe ed, *Problems of the Pacific, 1929 : proceedings of the third conference of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Nara and Kyoto, Japan, October 23 to November 9, 192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524-593에 의거한다. 이 글은 후에 蠟山政道, 1933, 앞의 책의 제1장~제4장의 토대가 되었다.

라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은 실제적인 ‘기성사실’의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워싱턴회의 이후 만주에서 일본의 지위나 ‘특수성’의 의미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만주 권익에 대한 양자의 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특수지위’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만주에서의 일본의 실제적인 이익을 보장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관계 국가들에 의한 국제적 보장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²³⁾

한편, 로아머는 만주문제를 둘러싼 토의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과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일본측은 만주에서 일본의 지위를 규정하는 조약 자체를 낳게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명확히 하려고 한 것에 반해, 중국측은 역사적 배경보다는 일본의 만주에서의 활동이 조약상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중국측은 그 사례로 만철부속지의 행정권, 영사관 경찰, 다나카 내각 당시 만주의 치안유지에 관한 각서(1928), 무순(撫順) 등지에서의 광산채굴권과 광산회사의 토지관리권 사이의 관계 등을 거론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만철부속지의 행정권은 조약 규정을 광의로 해석하여 조치에서의 행정권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영사관 경찰 및 치안유지 선언에 대해서는 조약상 근거는 없으나 만주의 치안 불안이라는 실상에 의거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광산채굴권과 토지관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²⁴⁾

이상의 논점에서 분명해진 것은 일본의 만주 권익을 조약에 근거한 협의의 것만을 인정하려는 중국과, 조약의 확대해석 내지는 경영상 필요에서 파생된 시설까지를 포함하여 일본의 권익으로 주장하는 일본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본의 만주 ‘특수권익’에 대해 이론적으로 지침을 제시한

23) Masamichi Royama, Ibid, p.593.

24) 新渡戸稻造編, 1930, 『太平洋問題-1929年京都會議』, 太平洋問題調査會, 231~236쪽.

것은 바로 국제법학자 시노부 준페이였다.²⁵⁾ 시노부는 이미 언급한 대로 일본 태평양문제조사회에서 만주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에서 만주 특수권익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²⁶⁾ 그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만주 ‘특수권익’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마다 제각각인 현상(現狀)을 지적하고 개념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노부는 먼저 일본 국민이 만주에 대해 특수권익을 주장하는 논거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만주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일본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만주는 일본의 ‘접양지(接壤地)’이며, 따라서 일본의 국방 및 경제적 생존에 지대한 관계가 있다. 게다가 만주는 일본 국민이 국운을 걸고 싸운 곳으로, 그 특수권익은 선혈의 희생을 치루고 획득했다는 역사적 심리가 농후하게 가미되어 있다.²⁷⁾ 특수권익 주장의 두 번째 논거는 “이러한 특수관계에 기초해서 제반 특수권리가 조약상으로 승인되고, 우리나라가 그 특수권리를 행사하고 그 목적을 위한 제반의 시설 경영을 실현했다.”²⁸⁾는 데 있다. 즉 조약상의 근거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수권익의 범주에 조약에 근거한 특수권리뿐만 아니라 특수권리의 행사를 위한 ‘제반의 시설경영’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이어서 검토할 특수권익의 개념 규정에서도 일관된다.

시노부는 특수권리와 특수이익의 의의에 대해 차례로 설명한다. 먼저 특수권리는 “근접 영토라는 관계, 기타 해당 체약국 사이에 한정된 특수 사정 아래서만 성립하는 이유로 체결된 특별조약에 의해(드물게는 기성사실에 기초해서-원문) 특별히 설정되고, 타국의 균점을 허용하지 않는 바의 일국 독점의

25) 시노부의 국제질서관에 대해서는 酒井哲哉, 2004, 「古典外交論者と戰間期國際秩序」 『國際政治』 139 참조.

26) 시노부는 태평양문제조사회 제3회 회의에도 참석하여 중국의 치외법권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27) 信夫淳平, 1929, 「滿州に於ける我國の特殊權益の檢討」 『滿州問題研究』, 日本評論社, 8쪽. 시노부는 이 발표 원고를 보완하여 『滿蒙特殊權益論』(日本評論社, 1932)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일본의 ‘특수권익’에 대한 개념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28) 信夫淳平, 1929, 위의 논문, 10쪽.

권리”²⁹⁾라고 규정하였다. 이 특수권리를 행사하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이익이 특수이익인데, “대부분은 상공업상의, 드물게는 정치상, 군사상의 어떤 시설 경영을 보기에 이르며, 그 시설 경영의 흥폐가 국가의 정책상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따라서 상대국이나 제3국이 거기에 침해를 가할 경우에는 국가의 힘으로 이에 대항할 것이 요구될 정도의 현실 이익”이라고 규정하였다.³⁰⁾

이상의 규정의 함의를 살펴보면, 특수권리는 특별한 관계에 기초한 특별조약 또는 ‘드물게는 기성사실’에 의해 설정되는 것으로, 특수이익은 대부분 상공업 즉 경제적인 것이나, ‘드물게는 정치상, 군사상의 어떤 시설 경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중국측이 주장하는 조약상 근거가 있는 경제적 권익에 한정된 권익과는 달리, ‘드물게’라고는 해도 조약이 아닌 ‘기성사실’에 의거한 권리,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넘어선 ‘정치상, 군사상의 시설 경영’까지가 특수권익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약에 의거한 권익 이외에 ‘기성사실’에 의거한 권익까지도 ‘특수권익’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일본 정부는 물론 지식인들 다수가 공유하는 인식이었다. 야나이하라도 시노부의 특수권익 개념을 토대로 만주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Ⅲ. 만주사변과 만주국

야나이하라는 훗날 1931년 9월에 발생한 만주사변이 자신의 학문이나 신앙에 큰 자극을 주었으며, 그 이듬해의 만주 현지 시찰(1932년 8월 하순~9월)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열차가 비적(匪賊)의 습격을 받아 만주문제는 자신에게 한층 더 심각한 체험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³¹⁾ 또 이 만주 시찰을 통해

29) 信夫淳平, 1929, 위의 논문, 12~13쪽.

30) 信夫淳平, 1929, 위의 논문, 13쪽.

“처음의 직감대로 만주사변이 일본측의 작위(作爲)”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학문과 신앙은 합심하여 자신을 만주사변에 대항케 했다고 회상하였다.³²⁾

이처럼 만주사변은 식민정책학자인 야나이하라의 만주문제 연구를 촉발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만주 시찰 후 겨울학기 ‘식민정책’ 강의의 일부분으로 만주문제를 강의했으며, 그 이듬해 1933년 여름학기 특별강의로서 다시 이 문제를 강의한 뒤 『만주문제』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 야나이하라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은 자료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비판적 정신”이라고 밝히고 있다.³³⁾ 즉 야나이하라의 만주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비판적 함의를 띠는 것이었다.

야나이하라에 따르면 만주사변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는 일본의 대외적 발전을 제국주의의 발전과정으로 인식한다. 청일전쟁이 이른바 ‘비제국주의국의 제국주의적 실천’이었다면, 러일전쟁과 한일병합은 제국 발전의 전사(前史)이며, 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본사(本史)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일본의 교주만 점령, 남양군도 점령, 21개조 요구, 시베리아 출병, 산둥출병, 만주사변으로 이어지는

31) 矢内原忠雄, 1997, 앞의 책, 103쪽. 그는 만주국 수립 후 당시 관동군 특무부로부터 도쿄 대학 경제학부의 오우치 효에(大内兵衛), 히지카타 세이비(土方成美)와 자신에게 전보를 보내 관동군에 와서 만주국 경영에 대해 조언을 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그 후 8월 말부터 9월에 걸쳐 스스로 대학 출장의 형태로 만주 시찰을 하였는데,新京(新京=長春)에서 북만주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비적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다(같은 책, 43~44쪽).

32) 矢内原忠雄, 1997, 같은 책, 116쪽.

33) 矢内原忠雄, 1963, 『滿洲問題』(1934) 『矢内原忠雄全集』第2卷, 岩波書店, 487쪽. 이 책은 강의내용과, 그것의 토대가 되었던 기존의 발표논문들이 부록으로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야나이하라는 이 책의 서언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논술, 용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썼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에 에피소드를 밝힌 것이 있다. “당시 이미 언론의 자유가 현저하게 속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라고 해야 할 곳을 ‘일본제국 발전주의’라고 쓰는 등 표현상 고심을 했다. 이 특별강의를 하는 가운데 대학의 군사교관이 교련 시간에 나의 강의를 듣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개했다.”(矢内原忠雄, 1997, 앞의 책, 116쪽).

과정은 명백히 자본주의의 독점적 발전단계에서 발생한 일본 국가의 적극적 행동인 것이다.³⁴⁾

이처럼 만주사변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중국 ‘국민주의’의 발전이 일본의 만주 특수권익을 위협한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선 야나이하라의 ‘특수권익’에 대한 규정부터 살펴본다.

그에 따르면 ‘특수권익’이란 “일국이 국외 지역에 대해 특별히 깊은 관계를 갖는 권익”으로, 그 권익은 “조약상의 권리와 실제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이 권리와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야나이하라는, 시노부는 “조약상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고, 권리가 실현(구체화)된 것을 이익으로 해석”했으나, “이익-현재의 이익 또는 장래 이익의 예상-이 없는 곳에 조약상의 권리가 획득되는 경우는 없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이익이 실제이자 기초이고, 조약상 권리는 이를 확인하고 합법화한 것이다. 만일 이익의 신장과 조약규정이 저촉될 경우, 어느 정도로 조약이 존중되는가는 현실의 국제정치에서는 실력의 문제”라고 하였다. 즉 조약으로 그 이익을 지킬 수 없다면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다.³⁵⁾ 이러한 인식은 국제법학자인 시노부보다 더 제국주의의 속성을 파고든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기본이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약상의 권리를 넘어선 실제상의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수권익을 이해하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되었다.

그렇다면 만주가 일본에게 ‘특수’권익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야나이하라는 권익 옹호를 위해 무력행사도 불사하게 되는 것은 그 권익이 ‘특수’한 경우라고 전제하고, 만주문제가 ‘특수’한 의미에는 3중성이 있다고 하였다.

34) 矢内原忠雄, 1963, 『滿洲問題』, 491~492쪽. 야나이하라는 「만주건문록」에서 만주국의 현황을 바라본 감상에서 “이상주의자는 지금은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제국주의시대를 나타내는 과정이 법칙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것을 보는 것은 근세 식민정책의 과학적 연구자로서 나의 학문적 만족이었다.”고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음을 확신했다(같은 책, 668쪽).

35)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496쪽.

첫째, 만주는 일본의 접경지역으로 국방, 정치, 경제상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만주 거주 외국인 중 일본인과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이며, 만주의 외국투자 총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73%에 이르기 때문에 특수권익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상의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실행행사로 이끌만한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고 다음의 세 번째 주장이 더해져야 실행발동으로까지 발전한다는 것이 야나이하라의 생각이다. 그 셋째란 주권국인 중국의 정치적 지배에 대해 특권적 지위를 요구하고, 중국 정치권력의 자유로운 발동을 구속하는 의미에서의 특수권익의 주장이다. 즉 “정치적 지배와 연관된 문제”로서, 이런 의미에서의 특수권익의 옹호야말로 만주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³⁶⁾

야나이하라는 이어서 위와 같은 만주에 대한 ‘특수권익’ 의식은 근년의 세계적 불황 속에서 더욱 강화되어, 기존 권익의 방위뿐만 아니라 국민 발전을 위한 독점적 지역으로서 그 의의를 재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이제 ‘만주는 생명선’이라는 슬로건을 낳았으며, 개개 조약상의 권리나 이익이 아니라 만주 자체가 일본의 특수권익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⁷⁾

그런데 이와 같은 만주에서의 특수권익 획득은 러시아, 미국 등 열강과의 경쟁의 산물이지만, 일본의 특수권익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은 열강이 아니라 중국의 저항에서 왔다고 야나이하라는 분석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발

36)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497~499쪽.

37)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499쪽. 만주 생명선론은 그 기원을 따지면 1890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이익선·주권선 주장이나 러일전쟁 시 자위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담론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의 발언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마쓰오카는 1931년 1월 23일 제59회 본회의에서 정우회를 대표하여 시데하라(幣原) 외상에게 질문하는 발언에서 “만몽문제는 우리나라의 존망(存亡)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선이다.”라고 처음으로 ‘생명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 후 그 발언에 대해 마쓰오카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첫째, 경제상, 국방상, 만몽은 우리나라의 생명선(Life line)이다. 둘째, 현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바는 생물로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존권(Right to a bare existence)이다.”라는 점이었다고 술회했다(姜克實, 2006, 「『滿州』幻想の成立過程」 『日本研究』32, 108~109쪽).

전한 중국의 ‘국민주의’는 만주에도 타도 제국주의 사상을 확산시켰다. 이들의 운동은 만주가 중국의 일부임을 주장하고, 만주에서 외국세력을 배척하고자 했다. 그것은 첫째 기득권익의 무시, 둘째 중국 자력에 의한 만주 경영, 셋째 배외사상의 고취가 그 내용을 이룬다. 이를 배경으로 만주 군벌 장작립, 장학량 부자의 국민당과의 접근, 즉 ‘국민주의’와의 연계가 관동군을 자극하여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다.³⁸⁾

이와 같이 중국 국민주의의 발전에 따른 일본과의 충돌을 만주사변의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인식이었다고 생각된다. 로아미는 만주사변의 발발 원인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자의 관점은 일본 자본주의 측에서만 관찰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극동정세는 중국에서의 국민주의 운동의 진전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빈발하는 여러 사건들의 발생원인은 오히려 중국측의 능동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³⁹⁾

한편, 이상에서 설명했듯이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국민주의의 충돌이 만주사변이며, 그 산물이 만주국이다. 그런데 이 만주국의 성립에 대해 야나이하라는 동북 ‘민 의’의 표현이며 일본군의 행동은 거기에 환경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⁴⁰⁾ 다만 그에 따르면 만주의 ‘민 의’에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 국민주의와 연계된 장씨 정권을 지지하는 민 의와 다른 하나는 만주국 건설로 표현된 민 의이다. 신흥 중국국민주의의 민 의인 전자는 장씨 정권과 함께 만주에서 구축되었고, 반(反)중국국민주의적, 왕도주의적 민 의인 후자가 만주국을 지지했다. 즉 만주국 건설은 만주 민 의의 일부가 일본군의 행동에 힘입어 반영된 것이었다.⁴¹⁾ 따라서 “신국가의 본질은 중국 국민운동으로부터의 이탈과 일본 특수권익의 존중”이라고 규정하였다.⁴²⁾ 이는 결국

38) 矢内原忠雄, 1963, 『滿洲問題』, 535~537쪽.

39) 巖山政道, 1933, 앞의 책, 239쪽.

40) 矢内原忠雄, 1963, 『滿洲問題』, 539쪽.

41)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547~548쪽.

42)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616쪽.

만주국은 일본을 추수하는 일부 세력에 의한 괴뢰국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야나이하라는 만주 사태와 관련하여 이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였다. 우선 정부의 만주사변비 지출을 문제 삼았다. 만주사변비는 1931년도에 760만엔, 1932년도 2억 8,880만엔, 1933년도 1억 8,630만엔, 1934년도 1억 5,930만엔으로 상당히 많은 재정지출을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지출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므로 만주국 경영의 방침과 정도에 대해 일본국민은 비판적 태도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³⁾ 다른 하나는 만주인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만주국을 건설하고, 일본은 정의로 이를 도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 설명이니 이러한 주장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신의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만주국의 정치, 경제 공작의 주안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라 만주국 자체의 발달에 있어야 하며, 만주국의 발달은 어디까지나 만주인의 발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

이와 같이 이미 기성사실이 되어 버린 만주국에 대해 가능한 한 정부가 내세운 명분에 걸맞게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야나이하라는 주장했지만, 사실 만주국의 본질에 대한 그의 근본 인식은 일본의 식민지에 준하는 국가라는 것이었다. 야나이하라는 1936년 후반기에서 이듬해 초에 걸쳐 행한 ‘식민정책’ 강의에서 만주국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만주국의 실체에 관해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이며, 따라서 식민지 문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식민정책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는 물론 국제법학자들 대다수가 만주국을

43)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672쪽. 1931년도~1936년도 5년간 국가재정의 세출규모는 2.5배로 팽창하였다. 경비 급팽창의 근간이 된 것은 첫째, 만주사건비와 군비개선비이다. 양자를 합한 군사비 총액은 5년간 2.14배로 팽창하였고, 이것을 총세출 중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1931년도 30.8%에서 1936년도 45.8%로 상승하였다. 1936년도까지 만주사변비는 합계 11억 2천여만 엔, 군비개선비는 합계 13억 3천여만 엔이었다. 경비팽창의 두 번째 요인은 시국구제비로서 농촌 구제에 사용되었는데, 1934년도까지 총액 8억 6천여만 엔이었다(安藤良雄など編, 1994, 『昭和經濟史(上)』, 日本經濟新聞社, 128~129쪽).

44) 矢内原忠雄, 1963, 앞의 책, 680쪽.

독립국가라고 하지만, 만주국이 일본의 정치적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만주국이 독립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만주국을 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준주권국가’가 아닌 보호국에 준하는 ‘준보호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⁴⁵⁾ 또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독립국가로의 발전을 돕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점점 더 독립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만주국 성립 이후의 전개과정을 지켜본 감상을 피력하였다.⁴⁶⁾ 야나이하라는 앞으로 만주에 일본의 지배에 대해 저항하는 민족국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⁴⁷⁾

한편, 교토제국대학의 야마모토 미오노는 만주의 주민을 다른 중국인과 동일시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면서 만주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설에 가담하였다.⁴⁸⁾ 그 결과 만주국의 독립, 분리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만주국의 성립을 만주민족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족자결주의 풍조에 힘입어 군벌정치의 학정에 저항해서 성취한 것으로 보고, 그런 이상 외국은 물론 중국 자신도 참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만주국의 국제 승인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승인이 없으면 외교상의 문제를 교섭할 수단이 없을 뿐이며, 만주국이 국가 구성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국가로서 존립하는 데 하등의 지장은 없다고 단언하였다.⁴⁹⁾ 이 이외에 남긴 글은 없지만, 이 정도의 언급을 통해서도 야마모토는 만주사변과 만주국에 대해 정

45) 矢内原忠雄教授述, 1937, 『植民政策(一)』, 帝大プリント聯盟, 11쪽. 이 책의 표지에는 ‘昭和十二年度(昭和十一年十一月十九日迄/分) 東京帝國大學經濟學部講義’라고 쓰여 있다. 이 자료는 야나이하라의 강의를 수기(手記)로 기록한 것으로, 강의에서 야나이하라가 말한 것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46) 같은 책, 15쪽.

47) 矢内原忠雄教授述, 1937, 『植民政策(三・終)』, 帝大プリント聯盟, 241쪽.

48)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만주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 가운데서 특히 만주를 중국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일본의 연구자와 만주를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의 연구자 사이에 만주의 귀속을 둘러싼 격론이 전개되었는데, 일본인 연구자 중에도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자가 있었음-, 야마모토의 언급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朝史〉』, 塙書房, 제5장. 만주국과 만선사 참조).

49) 山本美越乃, 1932, 『滿州國の承認問題と日米關係』 『公民講座』91, 9~14쪽.

부의 입장을 그대로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로야마는 만주국의 국제적 승인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일본이 만주국을 단독 승인(1932년 9월 15일)했다고 할지라도 국제적 승인이 없는 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성사실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야마는 만주문제의 해결은 국제연맹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제연맹에 적극적으로 만주국 승인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⁰⁾

IV. 만주이민과 일만 통제경제

1. 만주이민에 대하여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주열이 고양되는 가운데 만주이민론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1920년대 중반부터 심각화한 인구 증가에다, 1929년 발생한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불황에 빠진 일본사회의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다. 1915년에 시도된 만주로의 집단이민사업이 실패한 이후 만주이민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내에서도 만주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 1월 척무성과 관동군에서 각기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만주농업이민 추진에 큰 영향력을 미친 농본주의자 가토 간지(加藤完治)를 통해 관동군 측의 계획을 수용한 척무성의 만주농업이민안은 마침내 1932년 8월 제 63임시의회를 통과하여 그 해 10월 432명의 제1차 ‘무장이민’이 실현되었다. 만주이민은 이후 1935년까지 매년 약 500명 정도의 인원이 만주로 송출되었다. 1936년에는 히로타내각에서 ‘20개년 100만호 이주계획’이 수립되어 대량 이민정책이 확정되었다.⁵¹⁾

50) 蠟山政道, 1933, 앞의 책, 268쪽.

51) 이에 대해서는 淺田喬二, 1976, 『滿州農業移民政策の立案過程』, 앞의 책『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移民』: 기요가와 코지(清川紘二), 2004, 『일본으로부터의 만주농업이민』 『만주연구』 1 참조.

이상의 개요에서 살펴본 정부의 만주이민정책에 대해 야나이하라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만주가 일본인과 같이 문명도가 높은 지역의 사람들의 이주지로서 적절한 곳이 아니라는 입장에 서있다. 이하 그의 생각을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야나이하라에 따르면 만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력한 이주지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1930년 현재 만주 총인구 29,575,000명 중 일본인은 약 23만 명, 조선인은 약 80만 명이다. 지금까지 만주로의 이민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일본인의 이주가 부진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만주의 사회적 성질에서 기인한다. 즉 “일본인에게 있어 만주는 이주지로서보다는 투자지로서의 성질을 보다 더 많이 구비”하고 있으며, 투자처로서 더 많이 이용되었다. 만주는 한랭한 기후에다 겨울이 길고, 경제적 조건에서도 상당한 노동생산력을 갖춘 원주민이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인의 이주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⁵²⁾

이처럼 야나이하라는 만주가 이주지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사회로부터 만주로 이민을 배출하려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언급했던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왔던 인구증가 문제가 있다. 특히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외로 배출함으로써 해소하려는 논의들이 만주이민론의 배경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야나이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과잉 문제는 산업의 발달과 국제관계의 긴밀화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민은 부차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에 서 있었다.

야나이하라는 1927년에 간행한 『인구문제』에서 인구문제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해 정부에서 인구식량문제조사회를 구성한 것에 촉발되어 이루어졌다. 당시 인구문제가 식량문제와 함께 논해지는 것에 대해 야나이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식량이 부족한 적은 없었으며, 식량문제는 식민지의 쌀로 해결해왔다고 지적한다. 따

52) 矢内原忠雄, 1963, 『滿洲問題』, 560~561쪽.

라서 식량부족의 의미에서의 궁핍은 가까운 장래에도 예상키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식량결핍의 상상이 공포 심리의 근저에 있다면 그것은 “일소해야 할 신경쇠약적 미망(迷妄)”이라고 비판했다.⁵³⁾ 인구과잉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학의 진보에 의한 산업발전, 식민(하나 일시적 효과에 불과), 원활한 국제관계에 의한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의 중심은 오히려 다른 곳 즉 실업문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인구 과잉이 무산계급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것은 현재의 사회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⁵⁴⁾ 요컨대 인구과잉 문제를 해외로의 배출에 의해 해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은 만주사변 이후 고양된 만주이민론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즉 일본의 상공업은 앞으로 더 발달할 여지가 있고, 인구 도시집중율도 구미 국가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과잉인구 대책으로 해외로의 이민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⁵⁵⁾ 허나 세계적 불황 아래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만주로의 이민이 기대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만주이민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지만, 정부의 상당한 지원 없이는 역시 대규모 농업이민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⁵⁶⁾ 그는 이처럼 객관적 조건에서는 만주이민에 부정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만주이민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공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만철부속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만주인 농민의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골라 그 자체 하나의 경제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광대한 면적을 확보하여 집단적 이주지를 건설하는 것이다.⁵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만주이민은 그 효과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책으로서 추진되는 것은 결국 정치적,

53) 矢内原忠雄, 1963, 『人口問題』(1927) 『矢内原忠雄全集』第2卷, 岩波書店, 129~130쪽.

54) 矢内原忠雄, 1963, 위의 책, 173쪽.

55) 矢内原忠雄, 1963, 『滿洲問題』, 650쪽.

56)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564~567쪽.

57)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567쪽.

군사적 의도가 배후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나이하라는 “이민은 경제적 사업이므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경제가 허락하는 범위와 정도에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늦추지 않았다.⁵⁸⁾ 그는 앞서 언급한 1936년도 강의록에서도 “만주이민을 종래의 이민과 비교해서 성공할지 어떨지. 만주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했던 적이 없다. 일본에서 반드시 이민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의 점에서 보아도 만주 농산물이 세계시장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나의 생각이다.”⁵⁹⁾라고 밝혔다.

다만 조선인 이민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선인은 생활정도가 일본인보다 낮으므로 적은 재정적 보조로도 만주에 이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인을 위해 대규모의 집단적 이주지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토지소유 혹은 이용 권리를 확실히 한 위에 자유이민을 인정하면, 독립의 농업경영자나 일본인의 집단이주지에 대한 노동력의 보급자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⁶⁰⁾

한편, 야마모토 미오노는 만주이민에 대해 야나이하라와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우선 인구와 식량문제에 대해서 야마모토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그 문제를 다룬 바가 있다. 그는 인구의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반드시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즉 국민의 활동력이 풍부하여 대내외적 발전을 가능케 하고, 노동력 공급으로 산업입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국방력의 충실, 해외발전의 동기를 부여하여 이식민 활동과 경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문제로 인해 인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식량을 증산할 방법, 즉 경지확장, 경지개량, 농사방법의 개량, 조선 및 대만에서의 농업 장려·개량 등을 강구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⁶¹⁾

인구증가의 해결책으로는 소극적으로 산야 제한 등을 할 것이 아니라 적

58)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569~570쪽.

59) 矢内原忠雄, 1937, 『植民政策(三・終)』, 226쪽.

60) 矢内原忠雄, 1963, 위의 책, 571쪽.

61) 山本美越乃, 1922, 『我が國の人口對食糧問題』 『經濟論叢』 15-5, 87~89쪽.

극적으로 과잉인구의 일부를 국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민·식민 사업의 보호와 장려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에 이민·식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보호는 매우 부족했는데, 이를 수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와 장려를 해야 한다. 즉 먼저 이식민 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유력한 중앙관청을 설치하고, 각 이주지에는 직할 이주자를 보호·지도하는 역할을 할 기관을 특설하여, 이들 기관을 거쳐 내외가 상응하여 조직적으로 이식민정책을 확립, 실행케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⁶²⁾ 이 외에도 이민·식민 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야나이하라와는 달리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종전부터 이식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던 야마모토는 만주사변 이후 전개되는 만주이민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 ‘인구 대 식량’ 문제보다는 ‘인구 대 직업’ 문제 쪽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야나이하라의 진단과 같으나, 그 해결방안에서 양자의 견해가 같았다. 즉 야마모토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공업을 진흥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재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태이므로, 적극적 해결책은 과잉인구를 가능한 한 밖으로 옮겨 적당한 직업을 발견케 하는 것, 즉 이식민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만주가 이식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총면적은 만주국의 57%이나, 만주국의 인구는 일본의 37%에 불과하여 만주국에는 상당수의 인구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 둘째, 농경지를 보면 동삼성(東三省) 중 요녕성(遼寧省)을 제외하고는 기경지보다 미경지가 훨씬 많아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면 일본인 이민을 수용할 여지는 상당히 있다.⁶³⁾ 이어서 만주이민의 구성은 단체이민이 바람직하며, 단체원 중에는 적어도 교육자, 의사, 종교인 등을 넣고, 가능한 한 다소 기술적, 상업적 재능을 갖춘 자도 넣어 이주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62) 山本美越乃, 1924, 「移植民獎勵問題と世の謬見」 『經濟論叢』 18-6, 81쪽.

63) 山本美越乃, 1932, 「對滿移民政策の根本問題」 『外交時報』 668, 57~58쪽.

2. 일만 통제경제에 대하여

야나이하라는 일만(日滿)블록경제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일만블록경제론이 갖고 있는 자급자족성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블록경제론이 갖고 있는 원론적 지향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만블록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야나이하라는 블록경제는 자족적 봉쇄경제의 원칙에서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현재의 발달된 국제적 경제관계에 비추어 보면 일국 경제의 기초를 순수하게 블록경제에 두는 것은 불가능함을 일본과 만주의 무역관계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만주의 무역에서 일본(내지와 조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의 54%, 수입의 58%이다. 반면 일본의 무역에서 만주는 수출의 7%, 수입의 8%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다. 어느 쪽도 그 밖의 외국과의 수출입 없이는 경제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일만경제블록에 의한 자급자족의 실현도는 낮다는 것이다. 일만블록경제설이 갖고 있는 군사적 색채 — 경제봉쇄 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 — 를 고려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재정문제로 귀착되므로, 이 경우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재정적, 경제적 전력을 만주에만 기울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⁶⁴⁾

다음으로 야나이하라는 블록경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블록경제는 제국주의 단계의 국민적 자급자족 정책으로서 “블록경제는 제국주의 기초 위에 확대된 팩트 콜로니얼(Pacte Colonial, 중상주의 시대의 식민지맹약·인용자)”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블록경제가 중상주의 시대의 팩트 콜로니얼과 다른 점은 첫째, 블록경제에서 본국·식민지간 연결은 식민지 자체의 개발, 발전을 기초로 한다. 즉 식민지의 발전은 본국 경제의 기초를 확대, 공고히 하는 소이이다. 둘째, 블록경제에서는 식민지 생산력의 발달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식민지에서 각종 산업의 발달을 억압할 수 없다. 셋째, 블록경제에서는 식민지의 자본주의화에 따라 발달된 식민지 민족운동의 세력을

64) 矢内原忠雄, 1963, 『滿州問題』, 589쪽.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⁶⁵⁾ 요컨대 블록경제는 식민지 자체의 발전을 위주로 기획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만경제블록을 형성하려면 만주 자체의 개발을 도모해야 하며, 만주를 일본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만주의 개발을 위해서는 싸고 생산력이 높은 노동자를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자본 공급 또한 일본, 외국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시장 면에서도 어느 하나만을 중시하여 다른 시장을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⁶⁶⁾ 결국 만주에 블록경제를 실현하더라도 폐쇄적 봉쇄경제로 가두지 말고 대외적으로 개방할 것을 시사함으로써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만주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회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는 로야마도 비슷한 생각을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주문제의 해결은 어디까지나 국제연맹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던 로야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만주국 독립 이외에 극동의 평화를 확립할 길이 없음을 국제연맹 측에 논증하는 한편, 일본은 자위권 주장을 줄이고 국제적 안전보장의 방법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방침은 만주국의 발전권에 대해서도 취해져야 한다. 즉 만주국을 지지하는 ‘민의’를 앞으로 더 강고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 ‘선정’을 실현해야 하며, 만주 경제의 개발을 국제적 규모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만 경제관계와 문호개방정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의 길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⁷⁾ 이처럼 리버럴 지식인들은 가능한 한 국제협력을 통해 만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야나이하라는 만주 통제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만주 사변 이후 관동군은 만철에 대해 만주국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기관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1932년 1월 만철 내에 종래의 조사부를 확대한

65) 矢内原忠雄, 1963, 위의 책, 622쪽.

66)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623~624쪽.

67) 蠟山政道, 1933, 앞의 책, 289~290쪽.

경제조사회를 설치하고, 만주국 제1기 경제건설계획을 입안하였다. 이 경제 계획안은 관동군 특무부의 심의, 조정을 거쳐 마침내 1933년 3월 1일, 만주국 정부의 「만주국경제건설강요(綱要)」로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만주 경제건설의 실시방법으로서 1업(業)1사(社)의 특수회사 내지 준특수회사에 의한 경제개발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이듬해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한 일본 정부의 「일만경제통제방책요강(日滿經濟統制方策要綱)」(1934.3)에서는 일본과 만주국 사이에 경제적 이해의 조정을 꾀하는 ‘적지적응주의(適地適應主義)’를 방침으로 삼았다.⁶⁸⁾

야나이하라는 이상의 일만 통제경제책의 특색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그에 대해 각기 비평하였다.⁶⁹⁾ 첫째, 특수부문에 대해 합동기업 — ‘1업(業)1국(國)주의’에 의한 독점 회사 설립 — 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국적 기업합동안은 본래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전국의 경제기구가 고도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룬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만주와 같이 경제적 발달단계가 낮은 사회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특색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한다는 사상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윤이나 생산물 가격의 제한 등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경쟁이나 독점에 따른 폐해로 보이는 사실을 만주국에 재현하지 않도록 경제 건설 당초부터 고안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만주국 통제경제를 국가사회주의나 국가자본주의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1업1국주의’에 의한 전국적 트러스트화를 꾀하는 것이므로 생산 집중의 의미에서는 역시 독점자본주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만주통제경제론은 평시, 전시를 통틀어 산업동원계획을 중심으로 하며, 이 군사적 견지의 산업통제야말로 통제경제론의 가장 큰 특색이다. 이것은 자본가의 경제적 요구와의 합작이기는 하나, 군사, 경제가 반드시

68) 原朗, 1972, 「一九三〇年代の滿州經濟統制政策」, 滿州史研究會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 御茶の水書房에 의함.

69) 이하 이와 관련된 내용은 矢内原忠雄, 1963, 『滿州問題』, 594~599쪽에 의함.

시 관점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통제경제정책의 지도적 기관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여기서 야나이하라는 관동군 특무부가 만철 경제조사회를 군의 기구 속에 편입시켜 특무부를 경제참모본부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였다. 그는 다른 글에서 경제개발의 실행기관으로서 만철이 중심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만철을 개편한다면 그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⁷⁰⁾ 그는 “경제의 발달은 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전란을 주 목표로 하여 평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재정경제의 상도(常道)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야나이하라는 만주국 통제경제정책은 만주 개발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야마모토는 일만 경제통제론의 여러 주장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중 군수품공업 및 중요 공업에 대한 경제통제설에 대해서는 야마모토도 야나이하라와 마찬가지로 비판적이었다. 이것은 비상시를 위한 중요 산업의 국가적 통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만 양국의 경제 제휴에 의한 양국 민중의 이익 도모라는 일만 경제통제의 본래의 의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마모토는 수요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물적소(適物適所)주의’, 즉 만주는 원료, 일본은 가공 등으로 고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분업하자는 견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⁷¹⁾

70) 矢内原忠雄, 1963, 같은 책, 684쪽.

71) 山本美越乃, 1933, 『日滿經濟統制の意義に就いて』 『東亞』 6-3, 16~21쪽.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야나이하라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주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이미 1929년 태평양조사회 제3회 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된 만주문제에 대한 로야마, 시노부 등의 연구를 토대로 야나이하라는 만주문제의 연원에서부터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 만주이민, 일만 통제경제 등 잇달아 전개되는 만주를 둘러싼 현상(現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만주사변은 일본제국주의와 중국 국민주의의 충돌이며, 그 산물이 만주국이었다. 그는 만주국은 일본이 ‘식민지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이며, 정부의 주장처럼 독립국가가 아니라 ‘준보호국’ 정도의 위상이라고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이미 기성사실화된 만주국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내세운 명분대로 어디까지나 만주국의 이익, 만주인의 발달을 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실현된 만주이민에 대해서는 식민정책학적 관점에서 만주는 일본인의 이주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경제적 관점에서 효과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주이민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며 우회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것이다. 종전부터 인구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이/식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던 야마모토 미노오를 비롯해 당시 여타의 식민정책학자들이 만주이민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야나이하라의 반대 입장을 은 이채를 띠는 것이었다.

야나이하라는 일만경제블록론이나 만주 통제경제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일본과 만주의 경제블록만으로는 일본, 만주 모두 자급자족적 경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블록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만주 자체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설혹 일만경제블록을 실현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사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진 만주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만주 통제경제책에 대해서는 전국적 기업합동안은 만주의 경제발달 수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며, 군사적 견지에서의 산업통제는 경제의 ‘상도(常道)’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야나이하라는 만주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논문과 강의를 통해 비판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는 본문에서 언급한 1936년도 ‘식민정책’ 강의의 ‘개강사’에서 자신은 십 수 년 간 식민정책 강의를 해왔으나, 현실의 식민정책은 점점 더 자신의 주장과 멀어지고 반대로 전개되어 왔다고 참담한 심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⁷²⁾ 이 강의가 그가 도쿄제국대학에서 한 마지막 식민정책 강의가 되었다. 야나이하라는 『중앙공론』 1937년 9월호에 게재한 「국가의 이상(理想)」이라는 글이 문제가 되어, 그 해 12월 대학을 사직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이상’은 넓은 영토나 많은 인구를 보유하는 데 있지 않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정의, 국제적으로는 국제정의의 발양(發揚)”에 있다고 주장하였다.⁷³⁾ 이것에 대해 우익에서 맹공격을 가하고, 학내에서도 ‘불온당(不穩當)’하다는 의견이 일자 야나이하라는 스스로 대학을 그만 두었다. 중일전쟁(1937.7)이 발발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아시아로 팽창해갔다. 야나이하라의 사직 후 식민정책 강좌를 담당하게 된 농학부의 도바타 세이이치가 “일본 자체가 동아의 건설에 큰 노력과 고심을 하는 것을 그대로 학문의 세계에서도 감연히 담당해야 한다.”⁷⁴⁾고 결연히 천명한 대로, 1930년대 후반 이후 식민정책학은 대부분 대동아공영권과 밀착된 형태로 전개되어갔다.

72) 矢内原忠雄, 1937, 『植民政策(一)』, 1쪽.

73) 矢内原忠雄, 1964, 『國家の理想』 『矢内原忠雄全集』第18卷, 岩波書店, 326쪽.

74) 東畑精一, 1942, 앞의 논문, 653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矢内原忠雄, 1963, 『植民及植民政策』(1926) 『矢内原忠雄全集』第1卷, 岩波書店
 矢内原忠雄, 1963, 『人口問題』(1927) 『矢内原忠雄全集』第2卷, 岩波書店
 矢内原忠雄, 1963, 『滿洲問題』(1934) 『矢内原忠雄全集』第2卷, 岩波書店
 矢内原忠雄, 1964, 『國家の理想』(1937) 『矢内原忠雄全集』第18卷, 岩波書店
 矢内原忠雄教授述, 1937, 『植民政策(一)』, 帝大プリント聯盟
 矢内原忠雄教授述, 1937, 『植民政策(三・終)』, 帝大プリント聯盟
 矢内原忠雄, 1997, 『矢内原忠雄：私の歩んできた道』, 日本図書センター
 山本美越乃, 1922, 「我が國の人口對食糧問題」 『經濟論叢』 15-5
 山本美越乃, 1924, 「移植民獎勵問題と世の謬見」 『經濟論叢』 18-6
 山本美越乃, 1932, 「滿州國の承認問題と日米關係」 『公民講座』 91
 山本美越乃, 1932, 「對滿移民政策の根本問題」 『外交時報』 668
 山本美越乃, 1933, 「日滿經濟統制の意義に就いて」 『東亞』 6-3
 澤柳柳太郎編, 1926, 『太平洋の諸問題』, 太平洋問題調査會
 井上準之助編, 1928, 『太平洋問題-1927年ホノルル會議』, 太平洋問題調査會
 太平洋問題調査會編, 1929, 『滿洲問題研究』, 日本評論社
 新渡戸稻造編, 1930, 『太平洋問題-1929年京都會議』, 太平洋問題調査會
 人口食糧問題調査會編, 1928, 『人口問題ニ關する世論』, 人口食糧問題調査會
 人口食糧問題調査會編, 1930, 『人口食糧問題調査會答申説明』, 人口食糧問題調査會
 信夫淳平, 1932, 『滿蒙特殊權益論』, 日本評論社
 蠟山政道, 1933, 『日滿關係の研究』, 斯文書院
 Masamichi Royama, 1930, "Japan's Position in Manchuria" J. B. Condliffe ed, *Problems of the Pacific, 1929 : proceedings of the third conference of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Nara and Kyoto, Japan, October 23 to November 9, 192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연구문헌

- 기요카와 코지(清川紘二), 2004, 「일본으로부터의 만주농업이민」 『만주연구』 1
 문명기, 2015, 「왜 『帝國主義下の朝鮮』은 없었는가?-아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정책)론과 대만·조선」 『사충』 85
 이규수, 2004, 「아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정책론과 조선인식」 『대동문화연구』 46
 이석원, 2003, 「근대 일본의 자유주의 식민정책학 연구 : 아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

- 忠雄)의 식민정책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姜克實, 2006, 「『滿州』幻想の成立過程」 『日本研究』 32
- 岡崎滋樹, 2012, 「矢内原忠雄研究の系譜-戰後日本における言説」 『社會システム研究』 24
- 東畑精一, 1942, 「植民學の大觀」 『東京帝國大學學術大觀 法學部・經濟學部』, 國際出版印刷社
- 藤岡健太郎, 2005, 「滿州問題の『發見』と日本の知識人-京都會議と蠟山政道の議論を中心に」 『九州史學』 143
- 馬場明, 1983, 『日中關係と外政機構の研究-大正・昭和期』, 原書房
- 滿州史研究會編, 1972, 『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滿州國』成立前後の經濟研究』, 御茶の水書房
- 滿州移民史研究會編, 1976, 『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移民』, 龍溪書舍
- 山岡道男, 2010, 『太平洋問題調査會關係資料: 太平洋會議參加者名簿とデータ・ペーパー一覽』, 早稻田大學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 安藤良雄など編, 1994, 『昭和經濟史(上)』, 日本經濟新聞社
-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 <滿朝史>: 大陸經營と朝鮮・滿州認識』, 塙書房
- 酒井哲哉, 2004, 「古典外交論者と戰間期國際秩序-信夫淳平の場合」 『國際政治』 139
- 酒井哲哉, 2006, 「『帝國秩序』と『國際秩序』-植民政策學における媒介の論理」, 『岩波講座「帝國」日本の學知』第1卷, 岩波書店
- 中見眞理, 1985, 「太平洋問題調査會」 『思想』 782
- 淺田喬二, 1992, 『日本植民地研究史論』, 未來社
- 村上勝彦, 1993, 「矢内原忠雄における植民論と植民政策」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第4卷, 岩波書店
- 片桐庸夫, 2003, 『太平洋問題調査會の研究-戰前期日本IPRの活動を中心として』, 慶應義塾大學出版會

투고일 : 2016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6월 2일

■ Abstract ■

The New Horizons of Colonial Policy Studies and
Recognition of Manchurian Problems
- Focusing on Tadao Yanaihara's Arguments -

Park, Yang Shin (Hallym University)

This article reviews the recognition of a series of situations that unfolded around Manchuria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of 1931, and is based on the arguments of Tadao Yanaihara, a colonial policy scholar. Yanaihara started to study Manchurian problems primarily motivated by the Manchurian Incident. He viewed the Manchurian Incident as the result of the collision between Japanese imperialism and Chinese nationalism, leading to the production of Manchukuo. He argued that Manchukuo was a state having colonial interests for Japan, and at most only a “quasi-protectorate” rather than the independent stat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ed.

As for immigration policy to Manchuria, Yanaihara took the position that Manchuria is not suitable for the settlement of the Japanese. His position contrasted other colonial policy scholars of the time including Miono Yamamoto, who had emphasized the need for immigration and colonization as a solution to overpopulation.

Yanaihara was critical to Japan/Manchuria block economic theory and to the planned economy in Manchuria. He argued that the economic block cannot maintain a self-sufficient economy both in Japan and Manchuria, and that it is important to boos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anchuria independently. He also criticized the Manchurian controlled economy, arguing that joint national companies are not appropriate in light of Manchuria's economic level, and industrial control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is not common economic practice.

Key words : Tadao Yanaihara, Colonial Policy, Manchurian Problems,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Miono Yamamoto